

# 민주 “윤석열 키즈 퇴출” vs 국힘 “현역 프리패스 없다”

## 6·3 지방선거 D-100

정권 초 치른 선거, 여당에게 유리 민주, 국정지지도 기반 정권 지원론 국힘,李 정권 견제론에 당력 집중

23일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 지원론’을 앞세워 2022년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견제론’으로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구를 수성하기 위한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규정하며, 이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천 혁명’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지방선거, 총선 등과 전국단위 선거는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도·무당층이 많은 지역은 선거구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 정권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여당은 정권 초반 국정 지지도를 업고



6·3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일 오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야권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권 지원론’을 강조할 수 있다.

앞서 20년간의 사례만 살펴봐도 전국단위 선거가 정권 초에 치러지면 여당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2008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4석을 가져오는 대승을 이뤄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만에 진행된 2022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2석을 가져오며 압승했다.

◆興 “윤석열 키즈” 퇴출 선거… 野 “현직 프리미엄 없다”

특히 정권 초반 지지도가 높을수록, 승리의 규모는 커진다.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정권 지원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에 힘입어 ‘윤석열 키즈’를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을 ‘윤석열 키즈’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8곳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차지한 서울·부산 역시 ‘현역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끝까지 내란을 단죄하는 선거이자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윤석열과 등장한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시민들께 제시하고 선택받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독재’를 하고 있다며, ‘정권 견제론(심판론)’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러 차례 언급한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실정’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윤어게인(윤석열+again의 조어)’ 세력과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당내 극렬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상황이라, 전국단위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패스(free pass)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며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의 발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 위원장은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교가 돼야 한다”며 “현직 도지사(혹은 시장)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아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 혁명’을 이유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현역 광역단체장을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초 야당의 내용이 심해질수록 선거 결과는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李 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면 집값 안정”

국민의힘의 비판에 SNS 통해 반박 “매매시장 매출 늘어 전·월세가 안정 비정상적 정상화, 정부의 필생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역지 주장”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서 것은 야당의 주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2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며 야당을 직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월세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또 공급이 늘어나니 실거주 목적의 매수로 이어지며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며 “다주택과 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교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상적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

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SNS를 통해 꾸준히 투기적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특정 이슈를 반복적으로 꺼내는 것은, 시장에 정책 방향을 알려주려는 취지인 셈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슈는 곧바로 후속 조치가 따르기에,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장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투기적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보기 전에 정책의 반대 논리가 퍼지며,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준 것이 그동안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져왔다고 이 대통령은 판단한 것 같다”며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정책에 관련해 SNS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익숙한 스타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 트럼프 15% 관세 발동… 청와대 ‘신중모드’

美 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무역법 122조 인용·반박 靑, 불확실성 높아 기존 기조 유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현지시간)에는 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통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여전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응을 느슨하게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에 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는 본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위성락 국가안

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는 상황임에도,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및 품목관세 등이 근거를 잃었고, 이에 따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에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 대응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호관세가 단순히 경제분야로 국한될 수 없다는 지점도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관세 협상과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저농축우라늄 및 핵연료 재처리 등 문제도 함께 논의를 했다. 통상·안보 사안을 함께 협상했기 때문에, 관세 대응을 손쉽게 바꿀 경우 핵잠 등 안보 협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서예진 기자